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지역언론 톺아보기

주소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88 301호
전화 051-802-0916
홈페이지 www.bssiminnet.or.kr
이메일 buun1@hanmail.net

• 문서번호	지역언론톺아보기2021-017
• 수 신	각 언론사 보도국, 편집국
• 발 신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제 목	[지역언론톺아보기] 지역정치 감시 소홀한 지역언론
• 날 짜	2021년 6월 24일

말 많고 탈 많던 조직개편안 통과됐는데 언론은 조용했고 시민은 궁금하다

지역정치 감시 소홀한 지역언론

부산시의회는 6월 16일 제297회 정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박형준 시장 취임 이후 2번째를 맞은 회기로 조례안 54건, 동의안 10건, 의견청취안 1건, 예산안 4건, 승인안 4건 등 안건 총 73건이 처리됩니다. 특히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주요 쟁점 사안입니다.

부산 지역언론은 시의회 제297회 정례회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봤습니다.

1차 본회의 보도(6월 16일)	
국제신문	부산시의회, 박형준호와 허니문 끝...정례회 **송곳** 검증 예고(6/16)
	"X팔리는...." 여 시의원 도 넘은 박형준 **공세** 눈살(6/17)
부산일보	"허니문은 끝났다" 시의회-박형준호 **충돌** '초읽기'(6/16)
부산MBC	여 시의회, 야 시장 **견제** 강화(6/16)
KBS부산	부산시 추경예산.조직 개편안 통과?…**진통**예고(6/16)
KNN	박형준 시정 첫 정례회, '**송곳** 검증'(6/16)
'조직개편안' 통과 보도(6월 18일)	
국제신문	'청년' 놓은 市조직개편안 시의회 상임위 문턱 넘어(6/18)
부산일보	보도없음
부산MBC	부산시 조직개편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_단신(6/18)
KBS부산	부산시 조직개편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_단신6/18)
KNN	보도없음

‘어반루프 예산’ 심사 보도(6월 21일)	
국제신문	박형준 시장 공약 '어반루프' 예산 깎이나(6/22)
부산일보	부산시-시의회 '어반루프 용역비' 공방(6/22)
부산MBC	시의회, 어반루프 예산 집중포화(6/21)
	시의회 어반루프 예산 10억 원 절반 삭감_단신(6/22)
KBS부산	부산시의회,'어반루프 용역비' 제동…추가 심사_단신(6/21)
KNN	보도없음

<표 1> 정례회 1주차(6월 16일~6월 23일) 지역언론 보도 목록

‘갈등·대립’만 예고한 1차 본회의 보도

1차 본회의가 시작된 6월 16일, 지역언론은 정례회 소식을 주요하게 전했습니다. 시의원 ‘5분 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에 주목해, 야당 시장과 여당 시의원의 ‘대립’과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그림 1> 6월 16일 부산 지역언론 정례회 보도 헤드라인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각각 <부산시의회, 박형준호와 허니문 끝…정례회 송곳 검증 예고>(6/16, 3면), <"허니문은 끝났다" 시의회-박형준호 충돌 '초읽기'>(6/16, 5면)에서 여당 시의회가 협치 분위기를 끝내고 시정 견제에 나서고 있는 만큼, 박형준 시장의 ‘조직개편안’과 ‘어반루프 추경안’ 통과 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방송뉴스도 6월 16일, <여 시의회, 야 시장 견제 강화>(부산MBC), <부산시 추경예산·조직 개편

안 통과?…진통예고>(KBS부산), <박형준 시정 첫 정례회, '송곳 검증'>(KNN)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들은 박형준 시장에 대해선 “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시의회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와 같이 ‘협치’를 강조했고, 시의회는 “제대로 된 시장 견제를 보여주겠다고 한”, “칼날을 벼리는”과 같이 견제에 나서는 모습이라 수식했습니다.

협치를 강조하는 시장과 견제를 강조한 시의회, 모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임에도 언론은 이를 野 시장과 與 시의회의 방어와 공격 프레임으로 보도함으로써 시의회의 정당한 검증 과정을 부산 시정의 발목잡기라 우려케 했습니다. 이보다는 처리 된 안건, 나온 발언 중에서 시민에게 전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벼려” 전달해 주길 바랍니다.

국제신문만 주목한 ‘부산시 조직개편안 통과’

한편, 정례회 개최 전부터 시민사회와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부산시 조직개편안이 17일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터라 박형준 시장의 부산시 조직개편안이 어떠한 수정을 거쳐 통과가 되었는지, 시민사회와 당사자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이 반영이 되었는지 시민들은 궁금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언론은 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신문만 <'청년' 놓은 市조직개편안 시의회 상임위 문턱 넘어>(6/18, 2면)를 통해 비교적 상세히 전달했고, 부산MBC와 KBS부산은 단신으로 ‘통과’ 소식만 간단히 전했습니다. 부산일보와 KNN은 관련보도가 아예 없었습니다.

‘청년’ 넣은 市조직개편안 시의회 상임위 문턱 넘어

디지털경제혁신실 신설 등 골자
산학창업국→청년산학창업국
기재위, 명칭 변경 뒤 수정 가결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과 미래 비전을 실현할 부산시 조직개편안이 부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17일 부산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한 조직개편안을 보면 가장 큰 변화는 디지털경제혁신실의 신설이다. 산학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혁신을 꾀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시정을 펼치겠다는 박 시장의 비전이 반영된 개편이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아래 산업통상국과 청년산학창업국, 관광마이스산업국을 뒀다. 청년산학창업국에는 산학연협력과를 둬 산학협력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디지털경제혁신실에 혁신경제과와 디지털산업정책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블록체인금융과, 미래에너지산업과, 빅데이터통계과를 둬 흩어진 4차산업 관련 부서를 일원화 했다.

지난 16일 부산시의회 제297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종진 기자

도시균형재생국을 도시균형발전실로 격상한 것도 눈에 띈다. 이는 효율화와 균형발전을 중요시하는 박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기존 도시계획심은 도시계획국으로 조정돼 도시균형발전실 아래로 들어갔고, 해양수산물류국 산하에 있던 교통국이 합류했다. 시는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민건강국을 신설했다. 시민건강국 아래로 건강정책과와 보건위생과에다 시민방역추진단과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을 뒀다.

시의 조직개편안은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기까지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쳤다. 시는 지난달 26일 기존 여성가족국과 복지건강국을 통폐합한 여성복지건강실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난관에 봉착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 패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시의회 안팎에서는 조직개편안이 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애초 안을 상당 부분 수정한 안을 마련했다.

이날 기재위 심사에서도 입법예고 전 소통이 부족했던 점 등을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고, 격론이 오갔으나 우여곡절 끝에 조직개편안이 의결됐다.

이에 대해 부산시 이성권 정무특보는 "시의회가 그동안 유지해온 협치 기조를 바탕으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이 안정을 되찾고, 각종 현안 사업 해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직개편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 초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병욱 기자

<그림 2> 상임위 통과된 조직개편안 보도기사(국제신문, 6/16, 2면)

국제신문은 통과된 조직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를 ‘디지털경제혁신실’의 신설로 꼽으며 산학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혁신을 꾀하겠다는 박형준 시장의 비전이 반영된 개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도시균형발전실 격상, 시민건강국 신설 등을 주요하게 전하며 이성권 정무특보의 “시의회가 그동안 유지해온 협치 기조를 바탕으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입법예고 전 시의회와의 소통부족으로 ‘시의회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던 상황에서 안건 당사자인 시의회의 평가와 부산시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시민사회의 입장은 따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어반루프 안전성 지적이 ‘맹공’, ‘집중포화’?
지역정치 감시 소홀한 지역언론

6월 21일과 22일, 지역언론은 박형준 시장의 1호 공약인 ‘어반루프’ 예산 심사 건을 주요하게 보도했습니다. 국제신문 <박형준 시장 공약 '어반루프' 예산 깎이나>(6/22, 4면)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흥식 의원과 김민정 의원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어반루프의 검증되지 않은 안전성과 시급한 사업에 써야하는 추경 성격에 맞지 않은 예산 편성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삭감의 이유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습니다.

<그림 3> 시의회 ‘어반루프’ 예산 심사 보도(부산MBC 뉴스데스크, 6/21)

반면 부산일보의 <부산시-시의회 '어반루프 용역비' 공방>(6/22, 4면)과 부산MBC <시의회, 어반루프 예산 집중포화>(6/21)는 ‘어반루프’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의원 발언과 이에 대응하는 부산시 입장을 함께 전하며, ‘공방전’, ‘집중 견제’, ‘진통’, ‘맹공’ 등의 표현으로 시의원과 부산시의 갈등에 주목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박형준 시장의 어반루프 공약은 선거시기에 이미 실현 가능성과 안전성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이뤄져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행정 절차상 시의회의 이러한 검증행보는 꼭 필요

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언론이 나서서 갈등 프레임으로 보도하는 것은 검증의 본질적 내용이 정쟁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시의회는 정례회를 통해 조례 제정, 예산 심의, 시정 감시와 견제 등의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언론은 시의회 정례회 활동을 상세히 전하기보다는 부산시와 갈등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시의회에서 다룬 조례나 승인 사항 등을 주요 활동을 보도하고, 분석·평가하는 등 지역 정치를 감시·견제하는 지역 언론의 역할에 소홀한 보도였습니다.

<끝>